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79.04 (+233.51)		858.91 (+1.07)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3.791 (-0.017)		1418.25 (+2.25)

“시총기준 증시 퇴출 유예·재검토 해달라”

국무총리 만난 중소기업계

범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다 국무총리가 된 한성숙 총리에게 일정 시기총액 미만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안을 유예·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기간 준수,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이중 심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도 더욱 원활하게 해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성숙 총리를 초청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소·벤처 규제혁신 대토론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실적·재무 상관없이 상폐 위기
변동성 감안, 규제책 마련해야”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해 중소·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 총리 외에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등 10개 부처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폐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필요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 하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 하회시 상폐한다는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억원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증시 퇴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1주당 1000원 미만의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폐 요건도 신설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기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감안,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00억 미만’ 상향 조치 역시 적용 시기를 1년 뒤로 미루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시기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149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흑자기업은 45개사(30.2%), 상장 5년 미만의 기술특례기업은 26개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동전주는 155개사로 집계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시기총액 및 동전주 등 정량기준을 일률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서 “관련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은 기업 신뢰도 저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인재이탈 등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코스닥협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예정”이라며 “신설 위원회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관련 제도를 리스트업하는 창업벤처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못찾고 빚은 늘고… 고통받는 2030

고령·청년층富力의 양극화 심화
올해 전체 취업자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 5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장기화 추세의 청년층 고용 부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세대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최근 5년 사이 소득 1분위(최저)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급증했다. 12일 공개된 청년 실업률 수치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5년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청년층 취업자수 역시 45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른 연령대의 일자리 상황과 비교하

면, 유독 이들 층에서 극심한 부진이 보고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5월 4만명 감소했으나 6월에 6만3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금 더 늘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어들며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44.2%로 1년 전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27개월째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p나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1월(1.8%p)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수치는, 전 연령대의 실업률이 2.6%로 소폭(0.2%p) 오른 것과 대비

된다.

데이터처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문화가 과거 공채 중심에서 수시·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여건들이 과거에 비해 조금 녹록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11일 펴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로 떨어졌다가 2025년에 다시 0.625로 가파르게 뛰었다. 이에, 소득 축적만으로는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선박용 SMR 탑재 컨테이너선 모형 관람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SMR 등 7대 첨단산업,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첨단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 경쟁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대전환 시대”라고 했다. 7대 첨단산업은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으로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젠가 한 번 앞서는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 특징은 기술 교체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로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 누리는 선도자가 될 건지 또는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7대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차세대 경제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 혁신의 원동력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 씨앗들이 미래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참석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與 선관위 ‘불법 전화방·황명선 金 선거운동 의혹’ 신고 건 모두 기각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피해 입증해야, 국가의 2차 가해” /사진 뉴시스

▲산업차관 “호남 반도체 송전망 확보 가능…패스트트랙 추진”
▲조국혁신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형연 인준…“사법·법제 최고 전문가”

▲국힘 조강특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 방침, 최고위에 보고 후 승인받기로”
▲친명계 강득구 “호남 미래-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전대 투표를”